





2018 한국PR학회 특별세미나

"달라진 정부 1년, 달라진 소통을 논하다"

학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지 1년이 지났습니다. 과거와 달리 새 정부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여전히 높고, 이는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 결과서도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핵화와 통일염원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 정부 경제정책인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은 최근 발표된 각종 경제 지표에 의해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커질 수 있음을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 국정 운영 1년이 지난 지금, 정부와 국민들 간의 진정성 있는 소통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달라지고 복잡해진 상황에서 한국PR학회는 정부의 대국민 PR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현실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새 정부의 바람직스런 대국민 소통 방향에 대해 많은 분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꼭 부탁 드립니다.

2018년 6월 29일

한국PR학회 19대 학회장 박 현 순

세미나 개최 일시 및 장소

- 일시: **2018년 6월 29일 (금)** 오후 2시 20분 ~ 5시 30분

- 장소: 서울시 중구 명동 **유네스코회관 11층** 유네스코회의장

세미나 진행 일정

시간	프로그램	발표자 및 토론자
14:00~14:20	등록 및 안내	
14:20~14:30	개회	사회자: 김찬석 교수 (청주대학교) 개회사: 박현순 한국PR학회장 (성균관대학교)
14:30~15:00	기념사	김광호 사무총장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5:00~15:30	제1주제 발표	발표자: 신호창 교수 (서강대학교) "한반도 평화-통일-번영과 국내외 커뮤니케이션: 대내 혁신 커뮤니케이션과 대외 평화 커뮤니케이션"
15:30~16:00	제2주제 발표	발표자: 이완수 교수 (동서대학교) "무엇이, 어떻게 뉴스논조에 영향을 미치는가? 한국 경제뉴스 장기 시계열 데이터 분석을 통해"
16:00~16:15	Coffee Break	
16:15~17:30	종합 토론	발표자 전원 김영한 교수 (성균관대학교) 박천욱 국장 (바른미래당 홍보국) 임종빈 기자 (KBS 보도본부) 홍문기 교수 (한세대학교)
17:30~	폐회	

개회사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학회는 "달라진 정부 1년, 달라진 소통을 논하다"란 주제로 특별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사회, 발제, 토론을 맡아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축사를 맡아주신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김광호 사무총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급변하는 국제사회 속에서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를 향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역할은 우리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과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회는 작년 4월 "2017 새 정부에게 국민소통을 묻다"라는 제목으로 특별세미나를 개최해, 새로 들어서는 정부의 정책 홍보 및 국민 소통에 대한 바람과 제언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지 1년이 지났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많은 이슈들 속에 과거와 달리 새 정부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여전히 70% 대를 유지하고, 이는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 결과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핵화와 통일염원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외 통일에 대한 논의가 현실로 다가온 지금, 정부의 대국민 통합을 위한 효과적 커뮤니케이션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입니다. 오늘 신호창 교수님께서 발표하실 "한반도 평화-통일-번영과 국내외 커뮤니케이션: 대내 혁신 커뮤니케이션과 대외 평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우리 정부의 국민 대통합 커뮤니케이션 방향과 전략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 새 정부의 경제정책인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은 최근 발표된 각종 경제 지표에 의해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커질 수 있음을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는 좀 더 시간이 지나야 가능한 일이지만,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현실로 옮기는 과정 속에서 국민을 설득하고 합의를 얻어내는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지체되어서는 안됩니다. 오늘 발제를 맡아 주신 동서대 이완수 교수님의 "무엇이, 어떻게 뉴스 논조에 영향을 미치는가? 한국 경제뉴스 장기 시계열 데이터 분석을 통해"에서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새 정부 국정 운영 1년이 지난 지금, 정부의 정책기조가 안착되어 실행에 옮겨지는 과정 속에 많은 갈등관계가 가시화되고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한 혼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정부와 국민들 간의 진정성 있는 소통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바 없는 국제 정세의 변화와 미해결과제들로 인한 복잡한 국내정세 속에서, 한국PR학회는 정부의 대국민 PR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져야하는지 현실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오늘 특별세미나를 기획했습니다. 오늘의 고민과 논의가 새 정부의 바람직스런 대국민 소통 방향과 전략 제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PR학회 19대 학회장 박 현 순

•

한국PR학회 특별세미나

제 기주제 발표 한반도 평화-통일-번영과 국내외 커뮤니케이션 : 대내 개혁 커뮤니케이션과 대외 평화 커뮤니케이션

> 신호창 교수 (서강대학교)

한반도 평화·통일·번영과 국내외 커뮤니케이션: 대내 개혁 커뮤니케이션과 대외 평화 커뮤니케이션

신호창(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I. 문재인 정부의 운명

촛불로 시작한 문재인 정부의 운명은 촛불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는 바로 한반도의 평화·통일·번영이다. 대내적으로는 적폐청산, 시스템복원, 정책개혁 등과 같은 개혁정책을 성공시키고, 대외적으로는 한반도를 둘러싼 냉전 종식과 긴장 완화를 통해 통일 시대를 여는 평화정책을 완수하는 것이다. 이는 1차적으로는 한중일러 유라시아 경제, 2차적으로는 세계 경제의 허브로 발전 번영하여 한민족 역사상 처음으로 글로벌 주인공이 되는 길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소프트 파워(명성, 신뢰)를 만들어 내고 하드 파워(경제, 복지, 교육)를 정착시키는 커뮤니케이션은 가장 핵심 요소이다. 문재인 정부의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수행 능력이 문재인 정부가 지닌 운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왜냐하면, 적폐청산, 개혁, 냉전체제 종식 등의 과정에서 대내적으로는 적폐세력, 반대세력, 지지세력, 언론, 여론주도층, 공무원 등, 대외적으로는 세계 각국 특히 열강의 정부 지도자, 언론, 여론주도층 등을이해시키고 문재인 정부의 대내외 정책을 지지하도록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수한 PR 없이는 대내 개혁과 대외 평화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 그러나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고 있는 청와대 및 정부부처의 정책주도자들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과연 이를 위해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가?

그림: 한반도 평화·통일·번영 요약 로드맵

대내 개혁정책:

적폐청산, 시스템복원, 정책개혁 ----->

----> 통일 ----> 번영

대외 평화정책:

긴장완화, 냉전체제 종식 ----->

II. 대내 개혁 커뮤니케이션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개혁과 홍보

국민의 정부나 참여 정부 모두 자신들이 했던 것보다는 호의적 평가를 5년 내내 받지 못 하였다. 정권 1년차 때 충분한 홍보 추진 시스템을 갖춰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의 정부는 공보처를 폐지하고 공보처 기능을 국무총리실 아래 공보실로 축소시킨 후, 1년 뒤에 국정홍보처로 부활시켰다. 참여정부도 비슷한 기간이 지난 후에 홍보의 중요성을 깨닫고 각 부처 정책기획과 홍보실을 통합하여 정책과 홍보를 같이 수행하도록 하였다. 만약, 이들 정권이 정부초기부터 이와 같은 홍보의 중요성을 깨닫고 홍보 프로그램을 강화했었다면, 초창기에 이미지타격을 적게 받아 5년 내내 사뭇 다른 평가를 받을 수도 있었다. 정권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크게 달라지진 않더라도 적어도 정책을 효율적으로 일찍 추진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좀 더기여했을 것이다.

하여튼 이 두 정부는 다양한 개혁을 시도하였고 지금의 한국을 선진국 체제를 만드는데 기여한 정책들도 실행했었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 전 국민 확대, 건강보험 직장 및 지역 통합, 노인요양복지확대 등이다. 당시에 엄청난 저항이 있었지만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추진하여 개혁 정책을 어느 정도 완수할 수 있었다. 한편 언론혁신, 보안법철폐, 사립학교법 개정 등 실패한 개혁도 있었다. 당시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사전 커뮤니케이션 과정이 미흡하였고 그 결과 야당, 언론, 이익단체, 관련 공중 등의 저항에 부딪히고 그 벽을 넘지 못했다. 심지어 김대중 정부 초기 정권교체이후 관료들의 복지부동(신호창, 1998)도 한 몫을 하였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홍보

홍보 수준은 민주주의 발달과 괘를 같이 하며 노하우를 쌓으면서 발전한다. 4대강이나 역 사교과서 국정화와 같은 독단적 비민주적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민 의견을 무시했던 이명박 박 근혜 정부에서 정책홍보 기능은 퇴행적으로 축소되었다.

문재인정부의 개혁과 홍보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의 전철을 밟고 있다. 현 정부의 내치를 돌아보면 대입제도 개편, 의료보험개선, 재정정책, 노동개혁, 검경수사권조정 등 각종 개혁 프로그램이 관련 공중들로부터 저항을 받거나 촛불 시민 수준에 걸맞지 않게 추진되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초기 정책홍보 시행착오를 다시 겪고 있다.

청와대나 여당은 정부부처가 홍보를 못한다고 하는데, 홍보의 문제는 당, 청, 정 모두에 걸쳐 있다고 본다. 대통령실 홍보 수준이 곧 정부부처 홍보 수준이다. 현 정부부처의 홍보 조직, 예산, 평가 방식을 보면,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수준 및 시스템과 별 차이가 없다. 충분한 준비 과정 없이 출범한 정부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해는 가지만, 올해 어떻게 정책홍보 시스템을 재구축하느냐는 향후 문재인정부의 성패에 주요 키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작년에 공론화 과정을 거쳐 노후 원전 가동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데 성공을 하였지만, 이 역시 단발성으로 그쳤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자세히 확인하지는 안했지만, 공론화 과정과 이의 성과를 내재화시키기 위해 관련 조직의 홍보 시스템 변화를 꾀했다는 보도는 접하지 못했다. 한편,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입제도와 교육에 대해서도 국가교육회의가 공론화를 추진하고 있다. 원전정책에 적용해서 효과를 본 공론화라는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수십 년 간 시행착오를 겪고 단순하지 않은 정책의 개편에

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며, 이 또한 이 후 성과를 내재화시킬 국정홍보 시스템 변화를 동시에 추진하지 않는다면 역시 단발성 행사로 그칠 것이다.

최근 '대국민 정책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각 부처에 디지털소통팀을 꾸리고 인력을 보강하는 작업을 추진 중'(세계일보, 2018년 6월 27일)인데, 이는 정책 수립 과정이나 홍보 전략 보다 홍보 전술(매체)을 먼저 고려한 대응책으로 이는 근본적인 처방이라 할 수 없다.

바람직한 국정홍보 구축: 홍보시스템 재구축과 소통방식 리엔지어링.

우수한 정책홍보는 우수한 민주정부가 되는 주요 조건이다.

- 1) 홍보시스템 재구축. 홍보 효과는 홍보 예산과 시스템 등이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난다. 개혁을 추진하여 성공하려면 그에 걸 맞는 부처 정책홍보 시스템을 재구축하고, 충분한예산도 편성되어야 하며, 부처 간의 협력 및 공중과의 소통 방식에 대한 리엔지어링도 해야한다. 소통의 주체는 장관, 대변인 뿐 아니라, 전 공무원이 되어야 한다.
- 2) 정책홍보를 정책구상단계, 정책결정단계, 정책집행단계, 정책평가단계별로(신호창, 1999) 나눠 추진해야 한다. 정책 홍보의 주요 기능은 쟁점관리에 의한 갈등해소인데 이는 정책구상과 정책결정 단계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그래야 정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다. 대학입시제도 개편, 최저임금, 최저노동시간, 의료개혁, 종부세 증세 등과 같은 정책을 추진할 때에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쟁점을 검토하여 위기로 발전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이를통해 이해당사자간의 갈등도 해소했어야 했다.

개혁 정책을 실행하기 전에, 이 정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국민의 이해를 먼저 구해하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 검경수사권조정, 공수처 신설, 최저임금인상 등이 왜 중요한지, 예멘 난민을 인도적으로 대우했을 때 국익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등을 국민이 잘 모른다면, 야당이나 정책 공중의 저항에 추진 동력이 쉽게 약화될 수 있다.

- 3) 설득이 아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한다. 자신도 변하면서 상대방(정책 관련 제반 공중=정책공중)을 이해시키는 커뮤니케이션과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상대만 변화시키려 하는 설득은 그 효과에서 큰 차이가 있다. 대학입시제도 개편, 최저임금인상, 52시간 근로 등은 설득하려다 우왕좌왕하고 멈칫거리고 있는 형국이다. 전문가, 엘리트, 공무원 중심으로 정책 결정을 하게 되면 정권에 따라 움직이는 한계가 있다. 정책 공중들이 참여한 가운데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식이 무지하게 빨리 바뀌고 있고, 특히 젊은 층엔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방식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다만 장년층은 젊은 층과 다른 생각을 지니고 있어 이들 역시 신중하게 커뮤니케이션해야 할 대상이다. 이런 공중 환경 변화에 적합한 대응책은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임파워먼트와 집단지성이다. 정책집행자들과 정책 공중들이 정책결정 아고라에 모이는 것이다.
- 4) 부처간 부서간 협력이 시스템적으로 내재화되어야 한다. 스티브 잡스는 오래전부터 '혁신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나온다.'고 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조정경기에서 성공하려면 노사관계, 자영업, 공정거래, 중소기업, 최저임금 등 여러 정책이 호흡을

맞춰야(유종일, 경향신문, 2018년 6월 7일) 하듯, 어떠한 개혁 정책이든 성공하려면 여러 부처가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III. 대외 평화 커뮤니케이션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황과 통일 외교

한반도는 독특하게도 주변 4국 모두가 세계 최강국이다. 경제력 기준 세계 1, 2, 3위(미, 중, 일), 군사력 기준 세계 1, 2, 3위(미, 러, 중)가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다. 그런데 국제정치의 역사를 살펴보면 해양세력(미, 일)과 대륙세력(중, 러)은 끊임없이 경쟁해왔고, 한반도를 둘러싸고도 그러한 경쟁이 수세기 동안 진행돼왔고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분단이라는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윤영관, 2017). 한반도에는 지정학적 딜레마가 반복되어 왔다. 향후 남북간의 평화와 갈등 과정에서 '한·미·일 대 중·러' 경쟁구도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고, 중·일 간의 지역 패권경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미·일 대 중·러 경쟁구도가 첨예화할 가능성도 커서 (김성한, 2017), 통일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윤영관(2017)은 한국의 대외전략은 한반도 주변 4국이 통일이 자국의 국가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여기에 외교만으로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기에, 사전에 남북 주민들 간의 교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김성한(2017)은 특히 중국이 한반도 통일에 대해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대중국 설득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중국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방안으로 지속적으로 중국 내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을위한 여론 모니터링 및 형성 노력을 강화하는 대 중국 공공외교가 체계적으로 전개되어야한다고 말한다.

평화통일번영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올해 남북회담, 북미회담을 치루고 올해 말 종전선언을 앞둔 대한민국은 대외관계에서 세계 역사상 벤치마킹할 전례가 없는 상황을 맞았다. 그 동안 한반도에는 지정학적 딜레마가 반복되어 왔고, 어느 주변 열강도 통일을 바라지 않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남북한 동반성장의 길로 들어섰으며, 통일을 이뤄 '유라시아 시대'를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였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소련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처럼, 미국의 전통적 한반도 전략과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고, 북한의 김정은은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송영길위원장은 천연가스, 시베이아 횡단열차, 항만 등을 언급하며 북방경제는 우리의 블루오션이다고 했다(오마이뉴스, 2018년 6월 20일). 이런 기회를 살려 한반도 통일과 번영을 달성하려면 현 정부는이를 위한 대외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심각하게 논의해야 한다. 어느 한 국가에만 의존하지않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 균형적이며 지속가능한 신뢰 관계를 형성하도록 해야한다.

1) 공공외교(Public Diplomacy) 강화

미,중,일,러 등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은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심지어 미국의 진보성향 언론, 교포들조차 트럼프에 의한 한반도 통일을 원치 않는 듯 보인다. 향후 트럼프 리스크도 예견된다. 북한 앞에서 조선일보·요미우리·아사히신문은 하나다(미디어오늘, 2018년 6월 24일). 평화의 장애물은 워싱턴의 외교정책 기득권층이다(존페퍼, 한겨레 2018년 6월 4일). 열강의 국민은 우리와 다르게 평화와 통일을 같은 거로 안 볼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전통외교(Foreign Diplomacy)에 더하여 열강의 여론을 움직이고 지지를 받는 공공외교(Public Diplomacy)를 해야 한다.

공공외교(Public Relations+Foreign Diplomacy=Public Diplomacy)란 상대 국가의 주요 공중들(언론, 여론주도층, 전문가 등)과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우리 국가의 신뢰도를 높이고 우리에게 유리하게 여론을 움직이는 소프트파워(Soft Power)를 획득하는 과정이다. 한국의 공공외교는 정부에서는 외교부 문화외교국, 해외문화홍보원에서 정부 산하 기관으로는 KF(한국국제교류재단), KOICA(한국국제협력단), 재외동포재단(OKF) 등에서 실행하고 있다. 과거엔 소프트파워를 키우기 위해 국가이미지위원회(김대중, 노무현정부), 국가브랜드위원회(이명박정부)를 설치 운영하기도 하였다.

수천 년 역사 과정에서 한반도가 세계 최강으로 번영할 수 있는, 한민족의 가장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1) 외교부를 미 국무부와 같이 장관, 차관을 정치인으로 임명하여 부총리급 조직으로 격상시키고 소프트 파워 창출 기능을 키우거나; 2) 현재 공공외교를 추진하는 문화외교국, 해외문화홍보원과 과거 국가브랜드위원회를 하나로 묶어 대한민국의 평화, 통일, 번영을 위한 공공외교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글로벌소통위(가칭)를 창설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또는 3) 효과와 효율성을 고려하여 문화부 국민소통실(과거의 국정홍보처)과 글로벌소통위(여기서 제안하는)를 일원화하여 장관급 정부 조직으로 발전시켜, 대내 혁신 커뮤니케이션과 대외 평화 커뮤니케이션을 통합적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방법도 있겠다.

2) 국민 대상 커뮤니케이션 교육

통일의 최종결정자는 대통령이 아니라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는 국민이다. 국민 이해 없이는 냉전체제 종식, 통일과 번영이 불가능하다. 국민은 현 상황을 잘 모를 수 있다. 북한에 대한 정보 차단으로 북한 속사정에 익숙하지 않다. 올림픽 때 북한 측이 우리 노래 부를 때우리는 북한 노래를 얼마나 불렀나? 이번에야 평양 거리가, 사람들이, 건축물이 얼마나 세련되게 변했는가 보았다.

따라서 범정부 차원에서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교육이 필요하다. 우리 국민이 북한 사정을 제대로 알도록 하고, 통일의 의미를 충분히 받아들여 평화 세력을 선택하도록 하고, 더나아가서는 미래 세대 번영을 위해 희생도 감수 할 수 있도록 이해시켜야 한다. 초중고 교육에 북한학과 국제관계학을 묶는 과목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는 핵우산과 비핵지대화, 유러시아 시대, 중국(TCR) 및 러시아(TSR) 철도망, 북한의 산업, 교육제도 및 기술 수준 등 통일과 번영으로 가는 주요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핵우산과 비핵지대화 정책을 우리 국민이 제대로 구분하지 못 한다면 이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 국민이 북미회담 결과와 그 의미 자체를 인지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수십 년간 한반도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이었으며, 국민이 이에 대한 이해를 했을 때 비로소 냉전체제가 종식되고 평화가 올 수 있다.

우리에겐 북미회담 전까지는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가 핵심 의제로 알려졌다. 그런데 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핵우산 제거와 한미합동훈련 중단을 얘기했다. 대다수 국민들은 '핵우산'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수 있다. 원래 미국은 핵우산(평시엔 한반도에 핵을 들여 놓지 않지만, 전쟁이 발발하면 핵을 들여 놓을 수 있는) 정책을 북한은 비핵지대화(평시든 전시든 한반도에 핵을 들려놓지 않는) 정책을 추진했다. 북한 정책이지만 비극을 경험하고 싶지 않은 우리 입장에서는 한반도 비핵지대화가 더 바람직하다. 그러다 93년 남북 간 협상에서 나온 게 애매모호한 '비핵화'이다.

트럼프의 훈련 중단 조치는 일단 전시 핵우산은 포기하지 않지만, 평시 핵우산 훈련은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군부와 보수층의 반발이 있었지만 무조건 한반도 평화를 지향해야 할 우리 입장에서는 역사적 진전이다.

또 하나 성과가 있다. 핵우산—비핵지대화 논의는 한반도에서의 전쟁과 평화 차원이고, CVID는 북한핵 제거와 경제 제재 해제의 북미관계 차원에서 말하는 것인데, 이번에 이 두 차원을 의도했든 안했든 하나로 묶었다. 우리 입장에서는 두개의 다른 목적을 향하는 노선 기차길을, 하나로 묶어 최소한 종전, 평화, 통일, 한반도 비핵지대화(영세중립국?)를 위한 논의에 미국이 동참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우리 국민이 이렇게 복잡한 핵우산, 비핵지대화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관심이 없다면 열강의 주도와 기득권층 논리에 이끌리어 냉전체제가 자리 잡을 것이고, 평화의 길은 지난할 것이다. 우리 국민이 북한 사정을 제대로 알았을 때 평화와 통일이 온다. 우리 국민이 동반성장, 경협의 중요성을 인식하였을 때에 비로소 번영도 온다. 어떠한 대내 대외국가 정책이든 국민 이해와 지지를 구하는 커뮤니케이션을 동반해야 성공할 수 있다.

*신호창은 1990년 이래 올해까지 국정홍보, 국가이미지, 해외홍보, 공공외교와 관련한 15여편의 연구논문을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하였다. 3편의 관련 저술서도 출판하였다. 국내외 학회에서 30여회 이상 발표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연구 프로젝트도 10회 정도 수행한 바 있다. 이 발제문은 그간의 연구와 발표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참고문헌

김성한 (2017). 통일 후 동북아 외교안보 환경과 한국외교의 과제

신호창(1998). 제2의 건국,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한 PR전략과 전술, 정치정보연구, 제1 권 2호, 33-51.

신호창(1999). 정부의 홍보정책에 대한 고찰 및 발전적 국정홍보 모델의 제시, 홍보학 연구 제3호

윤영관 (2017). 21세기 국제관계와 한국의 대외전략

참고한 언론보도(미디어오늘, 세계일보,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한겨레 등) 정보는 본문에 표시하였음.

•

한국PR학회 특별세미나

제2주제 발표 무엇이, 어떻게 뉴스논조에 영향을 미치는가? 한국 경제뉴스 장기 시계열 데이터 분석을 통해

> 이완수 교수 (동서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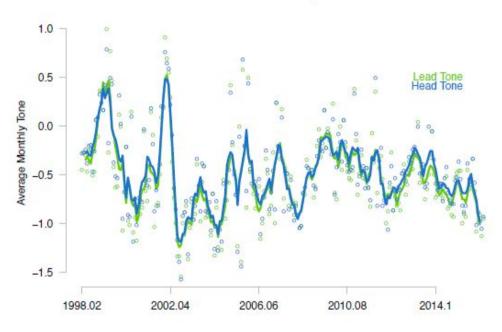
What, how does it affect the news tone?:

Through analysis of longitudinal time-series data of Korean economic news

Wansoo Lee (Dongseo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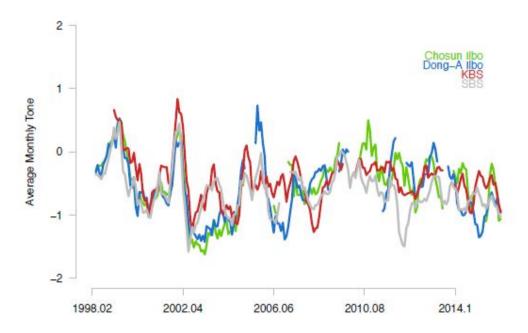
Let's start with some basic diagnostics. Here is a figure comparing the tone of coverage in headlines to the tone of coverage(1998.02-2017.02) using the 'lead' paragraph. Results are very similar.





Chosun Ilbo Dong-A Ilbo KBS SBS 1285 1224 2616 3101

Tone of Media Coverage, all Media



There are relatively small differences between the sources most of the time. There are a few periods that show differences – KBS is more positive than other sources in mid-2006, and less positive than other sources in early 2008; and SBS seems to be especially negative in 2012.

What drives media coverage? The table below shows some basic error correction models regressing n changes in media tone as function of either the CCI or the CLI. Past US work suggests that leading indicators matter more in media coverage than current indicators. These results show no real difference between the two. Media tone does respond to these economic indicators, but to roughly the same degree.

	Dependent variable: lead.tone.ch		
lead.tone.lag	-0.823***	-0.811***	
1.01	(0.011)	(0.011)	
cci.cycle.ch	0.480***	25 - 200	
	(0.181)		
cci.cycle.lag	-0.058***		
	(0.005)		
cli.cycle.ch		0.375**	
		(0.146)	
cli.cycle.lag		-0.022***	
		(0.004)	
Constant	5.388***	1.757***	
	(0.536)	(0.410)	
Observations	8,215	8,215	
R2	0.412	0.406	
Adjusted R2	0.412	0.405	
Residual Std. Error (df = 8211)	1.019	1.024	
F Statistic (df = 3; 8211)	1,918.483***	1,868.227***	
Note:	*p<0.1; **p<0	0.05; ***p<0.0	

Is there a negativity bias in responses to the economy? The following table tests this possibility, by allowing upward changes in the CLI to have a different impact than downward changes.

Results are similar to what has been shown in other countries – negative changes matter more than positive ones.

	Dependent variable: lead.tone.ch
lead.tone.lag	-0.811***
	(0.011)
cli.cycle.lag	-0.022***
TO DESCRIPTION OF THE PROPERTY	(0.004)
cli.cycle.ch.pos	0.294
	(0.196)
cli.cycle.ch.neg	0.478**
	(0.222)
Constant	1.750***
	(0.410)
Observations	8,215
R2	0.406
Adjusted R2	0.405
Residual Std. Error	1.024 (df = 8210)
F Statistic	1,401.161*** (df = 4; 8210)
Note:	*p<0.1; **p<0.05; ***p<0.01

There are some differences across sources. On average, KBS is more positive than the newspapers, and SBS is more negative:

	Dependent variable:
	lead.tone.ch
lead.tone.lag	-0.813***
Single-ster with an alternative of a	(0.011)
cli.cycle.ch	0.368**
-	(0.146)
cli.cycle.lag	-0.026***
arran en a roude de la companya de l	(0.004)
sourceDong-A Ilbo	-0.021
	(0.041)
sourceKBS	0.069**
	(0.035)
sourceSBS	-0.077**
	(0.034)
Constant	2.169***
	(0.418)
Observations	8,215
R2	0.408
Adjusted R2	0.407
Residual Std. Error	1.022 (df = 8208)
F Statistic	941.699*** (df = 6; 8208)
Note:	*p<0.1; **p<0.05; ***p<0.03

Are there differences depending on who is in power? Here is the same model estimated for the four different leaders in power during this period:

	Dependent variable:				
5	lead.tone.ch				
	Dae.jung	Moo.hyun	Myung.bak	Guen.hye	
	(1)	(2)	(3)	(4)	
lead.tone.lag	-0.781***	-0.798***	-0.894***	-0.875***	
ery and a loss of the contract of the	(0.019)	(0.024)	(0.021)	(0.024)	
cli.cycle.ch	0.252	0.649	1.072***	-1.610*	
100 (10 to 10 to 1	(0.187)	(0.512)	(0.341)	(0.903)	
cli.cycle.lag	-0.019***	-0.032	0.039**	-0.124**	
	(0.005)	(0.028)	(0.015)	(0.061)	
sourceDong-A Ilbo	-0.008	0.129	-0.011	-0.144*	
	(0.071)	(0.095)	(0.079)	(0.086)	
BourceKBS	0.159**	0.303***	-0.134**	0.042	
	(0.069)	(0.078)	(0.063)	(0.074)	
sourceSBS	-0.052	0.225***	-0.264***	-0.155**	
	(0.061)	(0.078)	(0.063)	(0.072)	
Constant	1.521***	2.440	-4.124***	11.948*	
	(0.535)	(2.795)	(1.513)	(6.158)	
Observations	2,592	1,728	2,172	1,723	
R2	0.392	0.400	0.452	0.446	
Adjusted R2	0.391	0.398	0.451	0.444	
Residual Std. Error	1.125 (df - 2585)	1.044 (df - 1721)	0.911 (df - 2165)	0.932 (df - 1716)	
F Statistic 2	77.984*** (df - 6; 2585)	191.487*** (df - 6; 1721)	297.707*** (df - 6; 2165)	230.623*** (df - 6; 17	

- 15 -

There are some interesting differences here. KBS is more positive than newspapers during Daejung and Moo-hyun. They become less positive than newspapers during Myung-bak. SBS follows a roughly similar trend – more positive than newspapers during Moo-hyun, and less positive during Myung-bak and Guen-hye. It is during Dae-jung and Guen-hye, then, that the two TV stations differ from each other. I am not sure how well this fits expectations, of course.

And it's table that only durng Guen-hye do the newspaper differ, where Dong-a Ilbo is more negative than Chosun Ilbo.

Discussion